

## 한국출판에 던져진 화두 '도서정가제'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오늘날은 소비자 주권시대다. 정보사회화의 발전 경과도 정보 소비자의 주권 확립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피동적인 단순 구매자를 소비자라 부르던 시대도, 그런 산업도 사라지거나 사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은 왕이며, 현대 자본주의 기업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기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소비자는 이제 시장의 질서를 만들고 산업의 성격을 규정하며, 끊임없이 소비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한다. 출판 역시 사회 변화와 독자 수요에 기반한 내용과 형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판산업에서 소비자인 독자는 오랫동안 주권 없는 구매자이자 계몽의 대상에 불과했다. 출판사와 서점이 제시하는 한정된 영역의 중복된 아이템, 고정가격, 저가본 시장의 미발달, 서점 단일 유통경로, 서지정보의 부족, 서비스 정신의 증발 등 전반적으로 출판산업의 소비자 만족을 위한 산업체질 형성은 미흡했다. 독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으며, 도서정가제(재판매가격 유지제도)도 그 범주 안에 놓여 있었다.

### 도서 정가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지난 1977년부터 업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시행돼온 도서정가제는 문란한 유통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교양을 제고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출판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국 서점의 균일가 판매에 의해 경쟁 리스크가 없는 비교적 안정된 전문소매점의 위상이 정립되면서 서점수가 증가하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반품 전제의 무기한 위탁판매'와 더불어 서점의 적극적인 판매 경쟁이나 마케팅

노력 동인을 제거한 역기능 또한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매 단계의 가격경쟁 배제는 적극적 판매 노력을 통한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가 법제화되거나 뿌리깊은 나라의 경우에도 서점의 정기 바겐세일(프랑스), 자유로운 정가 변경(독일), 비정가도서의 간행 및 판매 노력(일본) 등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비탄력적 정가제 운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대형 할인매장과 할인형 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가격 파괴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할인매장들은 도서 진열 종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서점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을 사람들에게 책과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줬다. 또한 할인형 인터넷 서점들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 속에서 다양하고 신속한 책 정보 제공과 할인을 무기로 네티즌을 끌어들이며 책의 새로운 판매경로로 정착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유통환경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도서정가제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가제가 붕괴되면 거품가격 형성으로 실질 가격이 인상돼 출판시장은 무질서해지며, 신간 발행이 저하돼 저작자의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따른 독자의 혼란, 고급 학술도서 발행 침체, 중소서점의 전·폐업 등으로 출판문화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국가의 지식 경쟁력이 위기에 처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정가제의 원조인 영국의 NBA(도서정가판매협정)는 1962년의 이른바 "책은 다르다"(Books are different) 재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1997년 3월 제한적거래관행재판소에서 재판매가격범 위반으로 판정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판결의 요지는, 30여년 전의 필요성과 달리 출판환경의 급격한 변화

로 도서정가제가 공정하고 경쟁적인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 및 기술발전에 따라 출판산업의 보호장치라 할 도서정가제는 시대적 정합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출판환경과 독자행동의 변화를 출판제도가 담보하지 못하면, 독자의 권익 보장은 물론 산업 성장도 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면, 판결 이후 영국 출판계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이 자리에서는 출판 관계자들이 우려했던 출판시장의 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형해화(形骸化)된 앙시앵레짐은 출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산업 성장이 자기규제에 의해 지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운용의 묘가 중요해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우리의 도서관문화가 충실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프랑스·독일·일본이나 정가제가 없는 미국·영국·스웨덴 등 선진국 어디를 불문하고, 생활 속에 자리잡은 공공도서관의 기능, 합리적인 출판유통 시스템, 고객 지향의 서점문화와 유통경로가 발전돼 있다. 도서정가제 유무와는 무관하게 독자 중심의 출판환경 조성이 시장 발전의 요체임을 알 수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나 서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독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그간의 업계 주장이 공적 명분이 아니라 내적 진실인가를 다시 물을 때다. 또한, 판매가의 몇 배를 쥐도 아깝지 않을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책값 시비보다는 책 내용이 토론되며, 독서하는 사회 풍토부터 마련한 후에야 정가제 논쟁은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책과 출판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현재와 같이 독자입장과 시장발전을 위한 고민의 진정성 없이 진행되는 정가제 논쟁에 '정가'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일이다. ●